

도덕성 제1요건…‘호남총리’ 유력

李대통령 내주중 새총리 후보 지명 장성출신 김황식 감사원장 등 거론

이 대통령이 다음 주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남(장성) 출신인 김황식 감사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여론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인한 후임 인선 작업을 어느 정도 마치고 집중적인 검증에 들어갔다.

청와대 인사 라인이 최근 3~4배수로 압축된 총리 후보자 인선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으로 정밀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 최종 결심과 정밀검증 작업 등을 고려하면 총리 후보자 지명은 추석 이전인 다음 주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역시 이날 이 대통령과 월례 조찬 회동을 하면서 “공직사회 공천이 장기화하지 않기 위해 후임 총리 후보자를 가급적 추석 전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후임 국무총리 인선의 최우선 기준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핵심기조인 ‘공정한 사회’에 걸맞는 도덕성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후보자의

의 낙마 사태가 재발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이 천명한 ‘공정한 사회’의 가치가 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러한 도덕적 자질을 갖춘 인물을 가운데 국정수행 능력을 겸비하고 국회에서도 거부감이 없는 인물을 총리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김황식 감사원장, 조무제 전 대법관, 전채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윤준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완구 전 충남지사, 이명재 전 검찰총장,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김황식 감사원장의 경우, 보수적 색채를 띠면서도 주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데다 전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긍정적

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다.

또한, 김황식 감사원장이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는 최초라는 점에서 지역 화합은 물론 국민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8.8 개각 인사청문회에서 대역 총공세를 지휘한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같은 김 감사원장이 출석하자 총리 관련 문제를 집중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표는 김 감사원장에게 “총리 제의받으면 할 것이냐” “총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복해서 묻고, 김 감사원장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그렇게 꼭 부러지게 얘기하지 말라”며 여지를 둘 것을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이주민회관 개관 이주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이주민회관 개관식이 8일 오후 2시 김희중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오스발도 파딜라 주한 교황대사, 결혼이주여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1320㎡ 규모로 문을 연 이주민회관은 이주노동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3개 센터를 축으로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등 가족복지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나령주기자 mjna@kwangju.co.kr

“국회 밥그릇 지키기에 구의회 폐지 원점으로”

여야 지방행정 개편법 합의…비판여론 비등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처리와 관련, 교섭단체별 2명씩 ‘4인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는 애초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통과한 구의회 폐지안을 원점으로 돌리는 쪽으로 의견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9월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선 이미 활동이 끝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의견을 받아 부분 수정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특위가 지난 4월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지 4개월여 만에 법안을 상정했으며 수정안 논의를 위해 한나라당 허태열·권경석, 민주당 전병헌·조영택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이 참석하는 협의체인 ‘4인 협상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였던 여야 합의의 통과는 뒷날에 미루어졌다. 구의회 폐지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구의회가 폐지되면 모두 1000여명의 구의원 자리가 사라지고, 구의원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내 사람 챙기기’도 불가해지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행정 비효율 제거라는 대의를 핑계치고 ‘밥그릇’에 집착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해 3월 구성된 이후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8건의 관련법안을 중심으로 8차례의 공청회를 하는 등 치열한 논의를 거쳐 통합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1년여 논의 과정에서 구의회를 존속시키려는 여야 의원들

의 반발이 빚발쳤으나, 구의회 폐지에 호의적이었던 여론과 여권의 지방행정개혁 드라이브가 법안의 통과를 뒷받침했다.

법안은 법사위로 넘겨진 뒤에도 4개월여 상정조차 못한 채 표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의 표류로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가로막히면서 통합창원시 등의 시급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부랴부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그러나 ‘4인 협상위’에 참여하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여야의 애초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구의회 폐지안을 고수하고 있어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구성 후 1년 내에 행정체제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 폐지 조항이 이번엔 백지화되더라도 추후 추진위 차원에서 폐지안이 다시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승용의원 곧 소환

‘오현섭 비리’…측근들 돈 수수 수사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 측근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만간 주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재임 기간 건설업체 등에서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한 오 전 시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6·2 지방선거 직전 주 의원 측근들에게 내 선거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6일부터 이틀간 민주당 여수를 지역위원회 상임고문인 주 의원 친척 주모(74)씨와 지방선거 대책본부장 박모(58)씨, 사무국장 이모(63)씨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친척 주씨는 오 전 시장 측으로부터 6000만원을, 박씨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이씨는 주씨가 받은 6000만원을 다시 건네받아 당시 지방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주씨와 이씨는 오 전 시장의 돈을 받아 선거 비용으로

쓴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주 의원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씨는 아예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역위가 지방선거 기간에 정당 후보 사무실로 사용돼 일어난 일로 나오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주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측근들이 모두 주 의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거액이 측근들에 건네진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의심이 가고 본인의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 소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 검찰에 송치된 오 전 시장을 다시 불러 보강수사를 하고 나서 이른 시일 내에 주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라며 “측근들은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 줘야”

李대통령 ‘공정한 사회’ 기준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준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추후 지역적 안배와 균형을 고려한 ‘탕평 인사’가 강화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정책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라고 말했다. 경제 위기 회복에 대한 해법이 수출을 위주로 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사회를 언급한 것이다.

공정한 사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처음 언급하면서 화두로 떠올랐지만 그 기준을 놓고선 정확한 규정이 없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특히,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들이 낙마한 뒤 제기된 공정 사회의 화두를 놓고 야권에서는 대대적인 사정을 위한 전단계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또한, 공정한 사회와 관련, “없는 집 아이는 교육 못 받고,

있는 집 아이만 교육받을 수 있다면, 없는 집 아이는 대를 이어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

청년 시절 노점상에서 대기업 최고경영자 자리까지 올랐던 이 대통령이 소위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으면 불공정하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공정 사회의 개념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예전부터 갖고 있던 이 대통령의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소금융과 햇살론, 보증자리 주택, 든든 학자금, 소외계층 문화바우처 사업 확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같은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나아가 딸의 특혜 채용으로 논란을 빚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신속히 경질한 것은 특권과 반칙 없이 기회가 똑같이 돌아가게 하는 사회를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하반기에는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와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양파! 재배면적을 줄이면 모두가 즐거워집니다.



양파 생산량! 무조건 많다고 좋을까요?

과잉생산은 가격 하락으로
양파농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의 적절한 생산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줍니다.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

